

탄소산업 경쟁력 강화 · 판로 확대 나선다

전주시, 2029년까지 총 200억원 투입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탈 솔루션 센터 구축사업’ 추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탄소산업도시인 전주시가 국내에서 생산된 탄소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표준·인증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국비 105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투입해 탄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탈 솔루션 센터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지역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탄소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및 인증 제도가 부족해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탄소제품의 표준·시험·평가·검사·인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탄소제품의 표준·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탈 솔루션 센터는 전주시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내 3층 규모(부지면적 478.84㎡, 연면적 1,157㎡)로 조성되며,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센터 내에는 탄소제품의 품질 검증

을 위한 42종의 시험·평가 및 인증장비가 구축되며, 단체표준 사무국 운영과 공인검사기관 및 단체표준 인증기관 지정을 위해 KOLAS 공인시험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요구사항인 ISO/IEC 17020(검사분야), ISO/IEC 17065(제품인증 분야)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건축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설계 용역 등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표준·시험·평가·검사·인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건립되는 만큼, 탄소제품뿐만 아니라 이차전지와 수소, 차

세대 모빌리티 등 전부의 핵심 첨단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소재·중간재·부품·응용제품·시험인증’으로 이어지는 완결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탄소제품 표준·인증 기반을 구축해 탄소제품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을 강화하여 탄소기업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전주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 지역 청년 관광창업자 성장 돕는다

‘관광창업 아카데미’ 통해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관광 창업 특화교육 실시

전주시가 다채로운 문화콘텐츠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 분야 창업을 꿈꾸고 도전하는 창업자들 양성에 나섰다.

시는 ‘전주시 관광창업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관광창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전주시 관광창업아카데미’는 관광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정립과 창업 실무 등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준비된 창업자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양성한 청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경진대회 및 실증을 통해 지역특화 여행패키지를 개발,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나아가고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오는 28일까지 운영되는 이 교육에는 당초 수료 목표인 20명보다 세배



전주시가 다채로운 문화콘텐츠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 분야 창업을 꿈꾸고 도전하는 창업자들 양성에 나섰다.

많은 신청자가 몰려 관광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교육은 각 단계별로 △창업 기초 △px 창업 심화 △투자유치 과정으로

운영된다.

또한, 관광 분야의 특화 창업을 위해 관광 창업 성공사례와 관광 상품 기획, 마케팅, 자금운용, 관광 트렌드 등

에 대한 집중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시는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과 29일 이틀 동안 무박 2일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교육 기간 중 발굴한 관광창업(여행패케지 등)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대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5팀에게는 팀당 최대 1,000만원의 실증비가 차등 지원되며, 시는 5개월간 전주지역을 대상으로 걸쳐 상용화 이전 지역특화 여행상품을 실증해 시장성을 검증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성과 우수자들에게 대해서는 오랜지플래닛 전주센터의 창업프로그램 및 창업패키지 사업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키로 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킨 경험을 통해 지역 내 스타트업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창업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지역 창업생태계가 더욱 견고히 성장하고, 향후 전주의 창업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과 지원책 마련에 힘껏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 취약계층 먹거리돌봄 강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 농식품 구매 이용권 지원

전주시는 올해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농식품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식품을 저렴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17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신부와 영유아, 만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단,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이용자,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이용자 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사용 가능 매장은 이달 중 농식품바우처 플랫폼(www.foodvoucher.go.kr)을 통해 최종 공고되며, 국산 과일류와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www.foodvoucher.go.kr), ARS(1551-0857)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외국인과 가구주 외의 대리 신청, 임신부 여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농식품산업과(063-281-6778)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섭 전주시 농식품산업과장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하고, 양질의 농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먹거리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 주거복지 서비스 업무역량 강화

구·동·주거복지센터 직원 대상 실무교육 실시

전주시는 지난 14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완산·덕진구청과 35개 동 주민센터 담당자,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창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사업 △주거급여 지원절차 및 실무 적용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향 △주택바우처 사업의 대상 및 지원 방식 △실무사례 분석 및 민원 대응 방법 등 심층 실무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창년월세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남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간 지원한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신청기간 준수 및 지급 기간 연장 등의 사항이 소개

됐다. 또, 변경사항 신고 절차 및 이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방안 등도 교육을 통해 상세히 설명됐다.

또한, 이번 교육이 주거복지 업무 담당자들의 직무능력 및 전문성을 높여 주거 취약계층의 욕구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만큼, 지역주민의 맞춤형 주거돌봄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사업 안내도 이뤄졌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주거복지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주거복지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주거 취약계층 등 주거복지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 인후3동, 신학기 장학금 전달

익명 독지가 기부... 7가구 자녀에 각각 30만원 지원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국승기)는 지난 13일, 신학기를 맞아 교육비 부담이 큰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정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은 다자녀가정과 한부모

가족 등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7가구의 자녀들에게 각각 3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며, 이번 장학금의 재원은 한익명의 독지가가 지난 2024년 6월부터 매월 약 30만 원을 기부해 마련된 것이다.



기부자는 ‘꿈을 향해 전진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돼달라’는 따뜻한 취지를 남겼으며, 그 취지에 따라 장학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하게 되었다.

국승기 인후3동장은 “익명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며, “이 장학금이 아이들이 미래를 향한 큰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육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